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민지
	1기 신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건축 정책 추진방안 연구	김성준
	에너지 빈곤층 대상 그린리모델링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문보람
	제조·조립 기반 건축 활성화 방안 연구	김은희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보전·활용을 위한 정비 기법 연구	김종범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작물 관리체계 마련 연구	현태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리체계 개선 방안	박일향
	중·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간주도·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	박석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도시 소멸마을 진단체계 연구	박성남
	재난대응시설의 확보·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백선경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윤호선
	위드 코로나 시대 생활권 공공시설의 대응방안 연구	남궁지희
	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한 건축물 생산량 지수 개발 연구	조영진

기본과제

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최근 발생한 2017년 서울 낙원동, 2019년 서울 잠원동, 2021년 광주 학동 해체공사 붕괴사고, 2022년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감리업무 부실이 지적되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나,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건축물 안전관리 및 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8년 건축물 안전 확보 및 건축행정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도입하였고, 2020년에는 광역지자체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한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는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기초지자체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자체는 41곳에서 약 13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듯 정부에서 센터의 양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등 센터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다수의 센터에서 전문인력 부족, 전문인력 고용의 불안정성 및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조건, 지자체마다 상이한 업무범위 등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여건과 현안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양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장 기반의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제 운영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현행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조사와 현장밀착형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모델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새롭게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에 포

함되는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다양한 운영모델을 제안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제도적 정착과 운영 내실화를 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김민지

② 1기 신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건축 정책 추진방안 연구

1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재건축 연한 도래에 따른 거주민의 재개발·재건축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계획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1기 신도시를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정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1기 신도시의 초고밀 도시로 변화’ 기조는 유사 노후계획도시들의 연쇄적인 재건축 수요 폭증 및 주변 도시들의 무분별한 고밀개발 당위성에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공간적으로는 기존에 신도시 설계 당시 적용되었던 원칙이나 밀도구성, 공공성 측면에서 초기 기본 단지 구성 개념과 근본적으로 배치됨으로써,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양상의 도시문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단지들을 ‘사업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의 영역에 맡겨 두기에는 도시 공공공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따라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민간영역에서의 ‘사유재’가 아닌 도시 공공공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간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설계·건축적 대응 차원의 기초연구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현황 및 재건축 관련 논쟁, 그간 재건축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여건 변화, 관련 이슈, 국내외 사례들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규제 완화 조건 아래 단지별 재건축 공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실제 1기 신도시 내 재

건축단지를 선정·분석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로 도출된 대표적인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 측면의 재건축 시물레이션을 통한 대안 도출 및 평가와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및 관련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한 재건축정책 수립·추진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준

③ 에너지 빈곤층 대상 그린리모델링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신재생 공급비용의 급격한 상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따라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되는 추세이다. 2023년 1월, 유례없는 난방비 폭탄과 한파에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취약한 주거환경에 사는 거주민은 전력·에너지 사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폭염과 폭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더 심하게 받고 있는 역설적인 공간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같이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대상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현물 지원 방식뿐만 아니라 주택개량 사업, 난방시설 개량 등 주택에너지의 물리적인 비효율성 해결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대개 단열이 낮은 건축물에 거주함에 따라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가 더욱 높은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충분한 에너지 소비가 어려울 경우 거주민 건강과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 빈곤층에 미칠 전기요금 인상 영향을 현물·현금 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에너지 빈곤층 거주지의 단열 및 기밀 성능 변경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은 직접적인 에너지 소비 및 탄소 절감과 삶의 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에너지 빈곤층 대상 그린리모델

링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이 온전한 삶의 질을 확보하면서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해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는 미래 발생 가능한 큰 갈등요소를 주거용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통한 에너지 복지 확대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주택에너지의 비효율성 문제에 보다 집중하여 에너지 빈곤층 대상 그린리모델링 연계 정책 방안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및 노후건축물 개선사업에 세부적 정책 방안 제시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문보람

4 제조·조립 기반 건축 활성화 방안 연구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정책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중 건설업의 재해비율(26.6%), 사망자 비율(51.9%)이 가장 높고, 건설폐기물 비율(44.5%)도 가장 높으며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 산업의 2.5배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특성으로 인해 저가·저기술 노동인력 고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축 생산성과 건축 성능 및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건축물 용도 및 형태가 복합·복잡해지면서, 정확한 도서의 작성과 균질한 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현재의 건축 분야 산업 문제는 구조화되어 반복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갈등 비용도 증가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는 제조·조립 기반 건축(Design for Manufacture and Assembly: DfMA)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설계단계에서 후속공정인 제작 및 조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제작과 조립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OSC, 모듈러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건설자동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설계나, 제조업, 운수업 등 공장생산 및 현장조립에 관계되는 다양한 산업을 함께 고려한 생산체계와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건축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으로서 제조조립 기반 건축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장 중심의 기존 공법과 차별되는 제조·조립 기반 건축 특성과 산업적·사회적·경제적 의의를 공유하고 그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 국내에 지어진 제조·조립 기반 건축과 유사한 건축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성과와 문제점, 한계를 짚어보고 선진 해외 사례의 비교하여 우리 여건에 상응하는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 연구를 통해 건축산업의 현안과 당면과제에 대응하고 나아가 컨테이너박스 건물, 임시 가건물로 인식되던 제조·조립 방식의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좋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김은희

5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보전·활용을 위한 정비 기법 연구

2021년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 2022-2026'을 발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23년 2월,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의 공모가 진행 중이다. '역사문화권 정비'는 기존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정비 개념과 더불어 건축·도시 분야의 공간환경 정비를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지역발전과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획이다. 특히 그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지 못한 비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에 초점을 맞춰 문화유산 보존·활용에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던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여건을 개선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

탐라·중원·예맥·후백제로 구분되는 역사문화권 내 비지정문화재 중 매장문화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정하여 역사문화권 정비의 정책수요를 파악한다. 지금까지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분류되어 일상공간임에도 문화재 보호와 활용의 중간 지점에 놓여 있었다. 연구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모호한 공간에 속한 보존조치 유적과 사적 인접 공간의 토지 소유자·거주자·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심층면담을 통해 역사문화권 정비의 가능성과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한다. 또한 한국 역사상 고대에 지어진 고분·산성·건물지 유적 등 비지정 유적 공간을 활용하고 정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문화재 보호와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의 경계를 재편하여 문화유산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고자 한다.

김종범

⑥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작물 관리체계 마련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등의 증가로 각종 공작물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증대되고 있어, 정부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건설 및 구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공작물의 유형 및 규모가 다양화되고, 도시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용지의 축소로 인해 건설행위 시 사고 위험이 높은 토지에 축조되는 공작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미흡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형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대형 공작물에 대한 인·허가 제도 미흡으로 인해 무분별한 공작물의 축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 내 건축물 위에 축조되는 첨탑 및 광고탑 등의 경우 강풍 및 호우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축조 신고 이후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기존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유지관리 조항의 삭제(2020.05.01.)로 인해 공작

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법적근거가 상실된 상태이다. 이에 다양한 공작물의 축조부터 유지관리 및 해체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공작물의 관리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다양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작물의 정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공작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또한 공작물의 규모, 축조위치, 유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공작물의 유형·규모·관계법령에 따른 축조·해체·유지관리 및 점검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태환

⑦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리체계 개선 방안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을 수리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적 활용을 위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문화유산으로서의 원형 보존과 적극적 활용 간의 상충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등록·관리되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으로는 「문화재보호법」의 국가등록문화재, 시·도 등록문화재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우수건축자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한옥등건축자산법」은 규제 완화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진흥법으로서 원형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반면, 「문화재보호법」은 원형 유지를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역시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하지 않아 멸실 혹은 훼손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건축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됨으로써, 현상변경 시 각종 건축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높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존과 적극적인 활용은 모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지향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수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수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공사업체의 자체적 의사결정에 따라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가운데 제도적으로 가치 보존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국가등록문화재를 주요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수리체계의 현황 및 쟁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수리 사례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후속연구의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일향

8 중·소규모 유희공간을 활용한 민간주도·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이처럼 인구급감 및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및 수도권 과밀현상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에는 아직도 주택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한 공공주도의 대규모 주택 공급은 주택시장 여건에 맞춰 빠르게 공급해주거나 수요 특성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며 꾸준히 늘어나는 재정적인 부담도 상당하다. 이로 인해 정부는 기존의 대규모 건설형 주택 공급 외에도 중·소규모 주택의 매입과 리모델링 방식을 통한 신속한 공급과 더불어 민간 협력을 통해 비용 절감 및 경쟁력 보완 등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가격이 비싼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해외 대도시의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이 국내 대비 높으며 장기적인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운영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vs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 사업자로 양분(양극화)된 임대주택 시장에 중간 규모의 사업자(건설사업자보다 운영사업자 중점)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로 합리적 수준의 주거규모, 거주환경(주거 서비스), 임대료 확보를 통한 거주만족도를 제고하면서 개발이익(자산처분에 따른 시세차익 등)이 민간(기업, 임대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를 지역과 임차인, 일반투자자 등 다수에게 분배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예상하는 연구 결과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진 유희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적은 비용(토지비, 건설비 등)으로 합리적인 주택을 민간이 주도로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안전성이 확보된 주거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박석환

9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도시 소멸마을 진단체계 연구

2020년 우리나라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되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면서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위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월 시행되었으며 지자체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 지원, 생활인구 개념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간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지원체계 미미 등으로 해당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위기 지방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공간 정책지원 및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국비 및 지방비 공공재원이 투입되어 대응하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 논리적, 지역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의 필요에 따라 이 연구를 제안한다. 연구의 주요 질문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공간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며, 세부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 질문1 : 인구감소 위기지역의 현안 및 문제점과 정책 추진 현안은 무엇인가?

② 연구 질문2 : 인구감소 위기지역 특성에 따른 공간부문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③ 연구 질문3 : 인구감소 위기지역 공간 대응 방안에 따른 정책 추진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①현안 및 공간전략을 살펴보고 특성을 구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 추진 시 참고 가능한 ②공간 전략을 메뉴판으로 제안하고, 부처 협업이 효과적인 ③시책을 발굴하며, ④특례사항 등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도들이 좀 더 효과적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성남

10 재난대응시설의 확보·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근 코로나19 비상사태(2020~)를 비롯해 포항지진(2017), 메르스 사태(2015), 세월호 참사(2014) 등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재난 시마다 대응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정부는 2019년에 이르러 단일통제를 위한 지휘체계를 정비했으며 이후 주요 한국형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재난 발생 시 시설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인데,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산 당시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에 대한 파악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임시 활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는 예

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데 재난 발생 시 대응에 있어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을 위한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지진, 방사능, 전신 등 각 법령에서 명시하고, 이재민을 위한 시설은 「재해구호법」에서 임시주거시설로 정하고 있다. 특히 임시주거시설은 재난 발생 직후 약 10분~1시간 내외의 긴급대피를 목적으로 하는 대피시설(지하주차장, 지하보도 등)과 달리, 최대 6개월의 임시거주를 목적으로 건축물 단위로 지정하며 2022년 기준으로 교회(1.7%), 숙박시설(2.9%)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공건축물(학교, 체육시설, 관공서 등)로서 전국 약 15,026개소가 있다. 특히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현재 지자체마다 지정 수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정 현황 특성조차 파악되지 않아 실제 재난 발생 시 지역 및 재난유형에 따른 적정 건축물 선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긴급대피 이후 활용하는 임시주거시설은 재난유형이나 재해규모 등에 따라 일시대피, 거점대피, 이동대피 등 단계별 기능, 임시거주 시 주거뿐 아니라 물자, 의료, 복지 등 필요기능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재난 발생 시 시설 대응 개선을 위해 첫째,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둘째, 심층분석을 통해 입지, 분포 등 지정 적정성과 재난대응 단계 및 필요기능별 활용방안을 검토하며 셋째, 지정 및 활용을 위한 요건을 도출하여 관련 정책과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재난 발생 시 적정 시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백선경

11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기술의 발전은 옥외광고물 매체에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옥외광고물이 정적인 형태의 광고 매체였다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옥외광고물(이하 디지털 옥외광고물, 디지털 광고물)이 증가하였고, 동시에 탄력적이고 동적인 형태의 광고물이 등장하였다. 디지털 옥외광고물은 법률에 따른 구분으로는 전

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은 1960년대 네온 광고의 형태로, 1990년대에는 FDT, CRT, LED 전광판 형태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고해상 LED를 활용한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건축물 외벽을 장식하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광고물의 성장에 맞춰 관련 법 개정도 이루어졌는데, 2016년 7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로 법제명이 변경되었다. 이는 옥외광고물이 산업, 경제, 지역활성화, 상업 마케팅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조망되면서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유형으로서 육성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상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의 범주와 설치, 표시기준은 2010년 이전의 법체계를 따르고,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디지털 옥외광고물은 별도의 설치, 규격에 대한 가이드 없이 옥외광고심의에 의해서만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광고물의 등장과 함께 도시공간에서 경험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건축물 입면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또한 디지털 광고물의 자극적인 광고와 동적인 특성은 교통의 안전한 측면에서도 우려가 되고 있으며, 일몰 후 디스플레이에서 발산되는 빛은 민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이 연구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확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갈등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도시경관의 계획적 관리 측면에서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윤호선

12 위드 코로나 시대 생활권 공공시설의 대응방안 연구

코로나19의 대유행(Pandemic)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도시공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복지, 돌봄,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일상생활의 편의와 사회경제

적 안전망을 제공해오던 생활권 단위 공공시설의 이용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초래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에 대한 논의들이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체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들 시설이 단계별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왔고, 지역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중에서도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시설'의 경우 '비대면-비접촉'으로 대체가 어려운 활동 특성상, 초창기부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기존 양육지원체계의 구조적 불평등과 취약지점들이 극명히 노출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적 돌봄 체계의 역할과 시설 간 연계, 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코로나19 단계별 대응지침의 실제 적용 및 작동양상을 실증적, 통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아동돌봄시설의 사례를 중심으로 코로나 시기 발생한 돌봄 공백과 격차의 시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 시설 운영 및 이용 주체들의 경험과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대응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설 및 지역 차원의 대응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증진할 수 있는 공간-제도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궁지희

13 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한 건축물 생산량 지수 개발 연구

건축물의 생산량은 건축시장의 경기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며, 다른 경제, 문화, 사회, 인구 등 지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표되고 있는 건축물 관련 통계는 규모, 용도, 구조, 지역 등의 구분에는 따른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 집계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생산은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 활동으로, 단순 집계로는 증감 원인 등 설명에 한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 사회, 인구, 문화 현상과 어

떤 관계가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현재 발표되는 건축물 통계(인허가, 착공, 사용승인 등)는 데이터 기반 건축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건축 산업계에서 건축 경기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축물의 생산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건축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축물 생산량 증감 원인을 인구, 경제, 사회 등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행정 데이터를 토대로 건축물 생산량에 대한 증감 원인을 인구, 경제, 사회 등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해석할 수 있는 지수로 개발하는 것이다. 세부 목적으로는 첫째, 건축물 생산량 지수 모델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둘째, 건축물 생산량 지수의 변동 원인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개발한 지수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발표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건축물 생산량 지수의 원시 데이터는 국가승인통계인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와 건축 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의 데이터 개방시스템의 건축인허가 관련 대응량 데이터를 활용한다. 건축물 생산량 지수는 통계지수로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며, 계절조정을 적용하여 전월 대비 등 시기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속적·주기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건축·도시 정책 시행 토대를 마련하고, 건축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조영진

2022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2월 22일(수)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2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와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대중과의 소통·공감을 위해 실시한 사전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뽑은 연구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2022년 우수연구에 선정된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임유경)', '지속가능 보행도시 조성지원 사업(오성훈)',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여경)'을 차례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대국민 선정 중요연구과제는 총 1,06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형 놀이자원망 구축 방안 연구(강현미)', '동네생활권 개념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장민영)',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건축기준 정비 방안(김상호)'이 선정되었으며, 수상자 대표로 나선 연구책임자가 주요내용을 소개하였다.



2022 아시아도시경관상 국내 수상작 시상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1월 13일(금)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2 아시아도시경관상(Asian Townscape Awards) 국내 수상작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아시아도시경관상은 아시아인에게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경관 관련 국제 시상제이며, 건축공간연구원은 2020년부터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예비심사를 거쳐 11개의 안건이 본상후보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주최기관 및 각국 심사위원의 온라인 합동심사를 통해 홍콩, 베트남, 태국, 일본 등 총 11개의 본상을 선정하였다. 국내 수상작은 '포항철길숲(포항시청)', '서울시 한옥 보전·진흥정책(서울특별시청)', '영도 근대역사 흔적지도(부산 영도구청)'이 각각 본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국내 수상작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후쿠오카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이 무산됨에 따라 국내 수상작을 대상으로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편,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는 아시아도시경관상을 통해 국내 우수 경관사례의 발굴과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news



국토교통부·건축공간연구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MOU 체결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기획(안)

출처 : 국토교통부, (2023),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관계기관 협업 지속 강화, 1월 12일 보도자료.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교통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1월 13일(금) 광주에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2022년 3월 국내 도시·건축 분야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시효과 및 연구성과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도시 및 건축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도시 및 건축 문화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공유 및 협력 사업 추진 ▲기타 각 기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및 홍보 등으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세계적 박물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협업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총 1.5천 억원을 투입하였으며, 현재 전시공간 설계 및 박물관자료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건축공간연구원- 국립한경대학교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은 1월 25일(수) 건축공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립한경대학교와 건축·도시 분야 인력과 정보 교류, 협동 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축·도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건축·도시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협력 사업 수행 ▲연구성과 확산 및 인적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세미나·포럼 개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학술교류, 정보교환, 인프라 공유 ▲기타 상호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은 “국립한경대학교와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많은 시민이 행복하고 품격 있는 생활공간의 마련과 효율적인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건축공간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은 2월 3일(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찾아 지방재정 건전화, 효율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를 위한 연구·정책제도 개발 협력 ▲지방자치단체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업무 협력 ▲연구 및 조사사업에 필요한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세미나, 포럼 등 국내외 관련 행사 공동 개최 등을 서로 협력하게 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재정 투입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정책적 분석, 공공건축의 디자인 관리방안 및 발주 방식 등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 및 도시 분야의 지방재정 투입 사업의 합리화, 공공건축 조성과 기획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번 업무협약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김해문화재단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김해문화재단은 건축·도시 공간의 종합적인 연구와 역사문화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월 21일(화) 건축공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두 기관은 ▲도시의 건축과 문화와 관련된 공동 연구 및 조사 협력 ▲건축과 문화를 융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실천 ▲전문 인력들의 소통 기반 마련 ▲유기적 교류 및 네트워킹을 통한 김해 문화도시의 브랜드 가치 확산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에 앞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 또한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역사문화도시 김해와 김해문화재단의 역할’, 이영준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의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를 위한 김해문화도시 사업 소개’,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건축자산 제도의 운영 현황과 건축자산 활용 사례’까지 양 기관 전문가 3인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이어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3인의 발제자들과 함께 역사문화도시의 건축문화 향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하여 2월 28일(화)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두 기관은 ▲국가·지자체 차원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학술행사 공동 개최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지역 재생을 위한 문화공간 활용 전략 연구 및 업무 협력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정보와 인적, 물적 자원 교류 등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및 생활권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전략 마련을 목표로 힘을 모으고, 생활권 단위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환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간 중심 문화적 삶을 주제로 한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은 “문화예술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도화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의 문화 복지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3월 14일(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축·도시공간 분야 관련 정책 발굴, 연구개발·지원 협력 ▲건축·도시공간 산업 및 시장 관련 정보 제공, 통계 자료 구축, 각종 지표 공동 발굴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지원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학술행사 및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 상호지원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은 “건축·도시공간 분야 시장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 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쌓아온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건축공간연구원- 광명시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은 광명시와 탄소중립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3월 23일(목) 광명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에너지기반형 도시재생과 도시공간 활성화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도출을 위한 공동연구 ▲확산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 관련 포럼, 세미나, 교육 등의 공동 개최에 서로 협력하게 된다.

앞으로 두 기관은 탄소중립형 도시재생 추진방안 마련과 사업모델 확산을 위해 협력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도 제고를 위한 포럼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은 “도시재생은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와 공감, 현장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와 정책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그간 구도심 재생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광명시와 협력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3회 AURI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도시 분야의 대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차세대 연구 인력 양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제3회 AURI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축·도시·조경 관련 분야 석·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4월 10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총 7개월 동안 운영되며,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14개의 연구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수행, 논문작성 지원 등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연구분야

공공건축, 건축서비스산업, 스마트도시, 보행환경, 범죄예방환경, 고령친화, 기후변화 대응 녹색건축·도시, 한옥, 건축자산, 마을재생, 경관, 건축·도시 빅데이터, 건축공간법제, 주거문화

연구주제, 연구목적 등 연구계획서 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며, 지원자가 희망하거나 연구분야가 유사한 연구진을 매칭하여 멘토링을 수행한다. 월 1~2회 온·오프라인 교류를 통해 연구수행을 지원받으며, 연구원 시설 이용 및 연구원 보유 데이터 제공, 논문 투고료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11월에는 공동논문, 학위논문, 위킹페이퍼 등을 토대로 한 성과발표회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합격자 전원에게는 프로그램 수료증이 발급된다.